

제332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2 호

국회 사무처

2015년4월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부의된 안건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1
- 0 국무위원(통일 홍보표 · 국토교통 유일호 · 해양수산 유기준) 인사 10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내현 의원 대표발의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강기정 의원 등 158인으로부터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심재권 의원 등 59인으로부터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10시03분)

○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承旻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년 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2학년 허다운 학생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여 오늘까지 엄마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운이의 어머니는 신경섬유종이라는 난치병으로 청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내 딸의 뼈라도 꺼안고 싶어서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운 양과 함께 조은화 · 남현철 · 박영인 학생, 양승진 · 고창석 선생님, 권재근 씨와 권혁규 군부자, 이영숙 씨, 이렇게 9명의 실종자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피붙이의 시신이라도 찾아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슬픈 소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희생자 295명, 실종자 9명 그리고 생존자 172명을 남긴 채 1년 전의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의 가슴에 슬픔과 아픔 그리고 부끄러움과 분노를 남겼습니다.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 정치가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그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인양을 적극적으

로 검토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지난 1년의 갈등을 씻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정부에 촉구합니다.

기술적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그 결과 인양이 가능하다면 세월호는 온전하게 인양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인양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한을 풀어 드려야 합니다. 평택 2함에 인양해 둔 천안함과 참수리 357호에서 우리가 적의 도발을 잊지 못하듯이 세월호를 인양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호 인양에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막대한 돈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 국민들께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동의해 주실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온 국민이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의 고통을 어루만져 드려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배상 및 보상 등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통합과 치유의 길로 앞장서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통합과 치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군에서 사망한 자식의 유해와 시신을 데려가지 않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금이라도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천안함, 5·18 민주화운동 등 우리 역사의 고비에서 상처를 받고 평생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국민의 마음이 열리고 통합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은 오랜 세월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유지와 발전에도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남북 분단과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지켜 왔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심각한 양극화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갈수록 내부로부터의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건전한 보수당

의 책무입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책무이듯이 내부의 붕괴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책무입니다.

새누리당은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빈곤층, 실업자,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장애인, 무의탁노인,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노선과 정책의 새로운 지향을 두고 이분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분들의 행복을 위해 당이 존재하겠습니다.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양극화를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분의 통찰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오늘의 이 변화를 통하여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자유시장경제와 한국자본주의의 결합을 고쳐 한국경제 체제의 역사적 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만큼은 정통보수의 길을 확실히 가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최근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정당, 안보정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미래산업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급식, 보육은 물론 심지어 의료, 교육, 주택까지 보편적 무상복지를 고집하던 야당이 드디어 성장의 가치, 안보의 가치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진보정당의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총선과 대선의 득표용 전략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변화 속에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고

민과 진정성이 담겨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새로운 변화를 보면서 저는 진영의 창조적 파괴라는 꿈을 가집니다. 진영을 벗어나 우리 정치도 공감과 공존의 영역을 넓히려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여야 진영 간, 보수·진보 진영 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진영은 그 본질이 독재와 똑같습니다. 진영의 울타리를 쳐 놓고 그 내부 구성원들에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데 어느 당, 어느 진영의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소신은 집단의 논리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 진영의 논리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고, 이는 국민의 눈에 어처구니없는 정쟁으로 비쳐졌습니다.

여당 시절 추진했던 FTA·연금개혁을 야당이 되니까 반대하는 일,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당론투표를 강요하는 일, 역대 정권마다 여당이 정부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해 오던 일,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진영싸움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가 된 이후 가급적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구속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보수와 진보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보수와 진보는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국가과제와 국가전략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영싸움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들은 합의의 정치를 통하여 정책을, 입법을, 예산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합의의 정치를 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과열경쟁을 자제하기 위해서도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시장에서 정치의 본능은 득표입니다. 표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죄수의 딜레마처럼 그동안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반복되었

고 이는 국가재정, 국가발전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역대 대선과 총선에서 각 정당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이 그 생생한 사례입니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지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려면 합의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진영의 논리와 포퓰리즘 경쟁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많고, 국민은 우리 정치를 다른 눈으로 평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노력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라고 믿습니다.

성장과 복지, 안보와 통일,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일자리와 노동, 교육, 보육, 의료, 연금 등 합의의 정치가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 아주 인기 없는 정책일수록, 그러나 국가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일수록 우리는 용기를 내어 통 큰 합의를 해야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월 국회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그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역대 정권이 모두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고통 분담이 수반되는 일이니 당연히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 인기 없는 개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국가 장래를 위해 지금 꼭 해야만 하는 개혁입니다.

지난 2년간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에서 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도전한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념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추진하려는 것도 아니고 20년 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하려 했던 것입니다.

‘급하게 줄속으로 하지 마라’ 이런 정치적 수사로 개혁을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것을 야당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발표된 2014년 국가결산에 따르면 총국가부채 1211조 원 중에서 53%인 644조 원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총당 부채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연금에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긴다는 것을 야당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은 우리 국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이 해결하지 못한 개혁을 국회가 마무리해 내야 합니다.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성숙한 고통 분담 의식, 거기에 여야 간 합의의 정치가 보태지면 역대 어느 정권, 어느 국회도 못 했던 개혁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표님과 우윤근 원내대표님께 호소합니다.

야당이 경제정당을 말하려면 이번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의견 제시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같은 노력을 해 왔지만 이해당사자에게 최종결정 권한까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결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국회가 하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무현 정부 임기 중인 2007년에 그 어려운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어 낸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국민연금 개혁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생생히 지켜보셨던 문재인 대표께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해 주신다면 국민들은 경제정당의 진정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여야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금 9부 능선까지 왔다고 인정합니다. 마지막 한 달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이 중요한 개혁이 또 무산된다면 19대 국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고 국민의 정치 불신은 극에 다다를 것입니다. 합의의 정치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꼭 성공하도록 의원님들의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공적연금의 강화가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7년 고통스러운 개혁을 단행했고,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기초연금 때문에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기여율 인상 없이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연기금 자산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개혁으로 수익률을 제고해서 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국민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세금과 복지 이슈입니다.

세금과 복지 이슈만큼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이슈도 없을 것입니다.

소득세 연말정산 사태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세금을 올린 정당은 재집권에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정치권의 금언도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 연설을 쓰면서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집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 새누리당의 공약이었습니다. 문제는 134조 5000억 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합니다.

저는 지난 4월 1일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3조 원의 복지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은 22조 2000억 원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 일은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더 어렵고 인기는 더 없지만 국가 장래를 위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세금과 복지가말로 합의의 정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서민 증세, 부자 감세 같은 프레임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저급한 정쟁은 이제 그만두고 여야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고민의 출발은 장기적 시야의 복지 모델에 대한 합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복지는 저부담·저복지입니다. 현재 수준의 복지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고부담·고복지는 국가재정 때문에 실현가능하지도 않고 그게 바람직한지도 의문입니다. 고부담·고복지로 선진국이 된 나라도 있지만 실패한 나라도 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앞으로 50년간 기형적 인구구조라는 재앙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복지제도를 더 확대하지 않고 그대로 가더라도 앞으로 복지재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부담·중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부담과 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OECD 회원

국 평균 정도 수준을 장기적 목표로 정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같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의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코 낮은 목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여야 간에 중부담·중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이 목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부담·중복지를 목표로 나아가려면 세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무슨 세금을 누구로부터 얼마나 더 거둘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증세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3년간 22조 2000억 원의 세수 부족을 보면서 증세도 복지 조정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해서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비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자와 대기업은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떼듯하게 더 내고 더 존경받는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세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만 중산층에 대한 증세도 논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최근의 여야 대표연설은 대부분 우리 국회가 세금과 복지 문제에 관한 대타협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월 우윤근 원내대표님도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여 세금과 복지 문제에 관한 여야 합의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도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복지 지출 중에서 보육 분야는 현실적 어려움이 큼니다. 여야 합의기구가 출범하면 이 문제도 여야와 함께 풀어 갑시다.

0~2세 보육료, 3~5세 누리과정, 0~5세 양육수당을 합친 올해의 보육 예산은 10조 2500억 원으로서 급식 예산 2조 5000억 원의 4배입니다. 최근의 지방재정법 개정 과정에서 보았듯이 보육재원의 조달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은 심각합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24년간 보육은 계속 확대되어 왔고, 박근혜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이 정책이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더구나 최근 보육시설에서 연달아 발생하는 사고들을 보면서, 0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77만 8000원이 지원되는데 집에서 키우면 월 20만 원이 지원되는 모순을 보면서 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가정이라는 보육공동체의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보육정책의 재설계가 절실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는 아이를 낳고 잘 키우는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5064억 원도 동시에 집행하며, 영유아보육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진지한 토론과 대안의 모색에 여야가 함께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도 앞으로 보육예산과 보육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성장은 오랫동안 보수의 의제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득주도형 성장, 포용적 성장’을 말했다 때 저는 이 새로운 변화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야당이 성장의 가치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반가웠습니다. 보수가 복지를 말하기 시작하고 진보가 성장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 우리 정치의 진일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성장의 해법입니다. 복지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성장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의 문제입니다. 성장의 해법은 복지의 해법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KDI가 발표한 장기 거시경제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3.5%의 잠재성장률은 2050년대에 1.0%로 추락합니다. 더 비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2040년대부터 1.0% 이하로 추락하여 206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합니다.

대한민국이 성장을 못 하는 나라, 저성장이 고착화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대재앙입니다. 성장을 못 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게 어려워집니다. 성장을 못 하면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고, 서민 중산층이 붕괴되어 양극화는 더 심각해지고, 국가재정도 버티기 힘들어 복지에 쓸 돈이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통일을 하더라도 통일비용을 부담할 재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100년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극화 해소 못지않게 성장 그 자체가 시대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2100년까지 한국경제가 성장을 못 하는 것은 경기변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장을 뒷받침하는 노동, 자본, 기술 등 세 가지 요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펀더멘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성장의 원인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20세기의 성취를 21세기에 다 날려 보내고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저성장은 이렇게 고질적이고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인데,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성장전략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집권 초반의 경제성적표를 의식해서 반짝경기를 일으켜 보려는 단기부양책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성장잠재력 자체가 약해져서 저성장이 고착화된 경제에서 국가재정을 동원해서 단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성장 효과는 없이 재정건전성만 해칠 뿐이라는 KDI의 경고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가재정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진통을 겪으면서 별 효과도 없는 단기부양책에 막대한 재정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건전한 국가재정은 그동안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최후의 보루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1997~98년의 IMF 위기와 2008~2009년의 금융위기도 그나마 국가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단기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IMF 위기처럼 극심한 단기불황이 찾아오지 않는 한 단기부양책은 다시는 끄집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장기적 시야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잠

재력을 키우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일은 한두 가지 정책수단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뼈를 깎는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자본, 노동, 여성, 청년, 교육, 과학기술,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혁명적인 변화의 최종 목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이며 성장잠재력 확충입니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재앙은 반드시 막아 내야 합니다. 0~5세 보육예산을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 구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자라서 나보다 더 잘살 거라는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보육, 교육, 노동, 일자리, 주택, 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인력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년, 여성,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이 더 이상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년 후 장년층의 재고용을 촉진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전쟁을 하겠다는 각오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청년의 고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자리는 삶의 문제입니다. 사회 문턱에 갓 들어선 청년들에게 실업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 공기업, 정부 산하 단체부터 청년 일자리 늘리기에 앞장서야 합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호소하고, 청년 고용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청년 창업에 대한 국가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법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취업하기를 원하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에 대한 임금보조를 확대하고, 중소형 공장이 밀집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재양성은 성장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야 할 분야이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분야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과학기술주도형 성장으로 가려면 오랜 시간에 걸친 일관된 국가 R&D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분야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입니다.

연구개발예산의 총 투자액은 확대되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분야를 국가가 담당해야 합니다. IMF 위기 이후 누적된 문제로 고장난 국가 R&D 시스템은 근본적인 진단 후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과학기술교육의 혁신과 이공계 우대 정책도 계속 확대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이 더 강해져야 관련 서비스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제조업의 위기는 지금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들 주력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벤처만 우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는 업종과 기업들이 더 잘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한계기업은 과감히 퇴출시켜 새살이 돌아나도록 하고, 잘하는 기업에게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장의 해법은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고통스러운 개혁입니다. 성장을 향한 개혁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공정한 고통 분담, 공정한 시장경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우리 합의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노사정 대타협이 바로 그런 합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간까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 못지않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등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공기업은 지금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더 확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30대 그룹과 대형 금융기관들도 상시적 업무에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은 지난날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재벌 대기업은 무한히 넓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등이 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가 친척에게 돈벌이가 되는 구내식당까지 내주고 동네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끄러운 행태는 스스로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천민자본주의의 단계를 벗어나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아픔을 알고 2차, 3차 하도급업체의 아픔을 알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존경받는 한국의 대기업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부는 재벌 대기업에게 임금 인상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청단가를 올려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과 고용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재벌정책은 재벌도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재벌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불법 정치자금, 외화 도피 등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 보통 기업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검찰, 법원은 재벌들의 사면, 복권, 가석방을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공정한 고통 분담과 공정한 시장경제는 결국 복지, 노동, 경제민주화, 법치로 귀결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세, 중부담·중복지의 사회안 전망, 비정규직 대책, 청년일자리,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대책들이 성장의 해법과 같이 가야 합니다.

정부는 성장잠재력과 상관없는 단기부양책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아직도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 있는 박근혜정부가 이상과 같은 근본적 개혁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정부가 단기부양책보다는

노동 금융 교육 공공의 4대 부문 개혁을 말하고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대 진입을 목표로 '3년의 혁신으로 30년의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3년 내의 성과에 조금해서는 안 됩니다. 잠재성장률을 4%대로 높이는 일은 3년의 개혁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그다음 정부가 후퇴시킬 수 없는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만 있다면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시작해서 세금과 복지, 노동, 보육과 교육, 청년 일자리 그리고 성장 등의 분야에서 개혁의 인프라를 제안하고, 우리 국회는 합의의 정치로 국가의 장래를 준비하는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야당이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론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의 확대는 빈곤과 양극화 해소라는 차원에서 동의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지출 확대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내수 진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100년까지 저성장의 대재앙이 예고된 우리 경제에 대하여 이 정도의 내용을 성장의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을 정치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성장의 해법이 없었던 것은 지난 7년간 저희 새누리당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그리고 창조경제를 성장의 해법이라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왕 야당이 성장이라는 시대의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여야가 그 해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합의의 정치로 성장을 위한 지난한 개혁의 길로 함께 가자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많은 국민들께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을 주며 양극화 해소와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도 돌봄, 보육, 교육, 병

원, 신용, 도시락, 반찬가게, 동네슈퍼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부담·중복지를 목표로 나아간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수요를 국가재정이 모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기업이 만들어 내는 일자리와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늘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역사적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해 왔던 선진국들도 사회적경제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정치적 오염과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일은 여야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제 분야의 마지막 주제로 저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작년 말 가계부채는 108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민 1인당 평균 2150만 원이며 가계부채가 GDP의 75%입니다. IMF 위기 때는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작은 충격에 대규모 도산 사태와 대량 해고가 발생했고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지금은 가계부채가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LTV, DTI의 완화와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높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개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경제 전체의 리스크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정부가 정교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두 차례에 걸친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과 정부의 부담으로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상환 능력이 없고 부실의 위험도는 높은 한계선상의 가계부채에 대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성장, 복지와 함께 안보, 통일은 우리의 4대 국

가 어젠다입니다.

올해는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과 함께 분단이 된 70년 전의 슬픈 역사는 분단을 허물어 통일과 진정한 광복을 이룩해야 하는 역사적 과업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북정책이 쌓여서 통일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통일 이전에 북한의 개혁 개방, 북한경제의 발전, 북한체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북정책이라는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북한은 그런 이성적인 대북정책이 통하지 않는 상대입니다. 문제의 핵심에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이란과 국제사회의 역사적 합의가 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란보다 핵무기 개발이 훨씬 앞선 북한의 핵 문제는 조금도 진전이 없이 악화되어 가기만 할 뿐입니다.

2012년 12월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의 3차 핵실험 이후 우리 군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한 핵미사일을 이미 실전 배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국민들은 언제 우리를 향해 날아올지 모르는 핵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사드(THAAD) 요격 미사일의 배치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과연 우리 손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핵 문제를 압박과 유도의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1994년의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2012년 미국과 북한의 2·29 합의가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은 그때마다 약속을 깨고 핵개발은 계속되었습니다.

북핵 문제를 현명한 외교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경주하되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역지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국방 능력을 갖추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안보정당을 내세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묻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행여 북한이 핵공격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보정당은 한마디 말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북핵과 사드, 천안함 폭침,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과 행동이 있어야 스스로 안보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야당을 비판하려고 거북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늘 말로는 ‘국가안보는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생각의 차이는 너무나 큰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국민의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국민에게 내일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매일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보수당에 입당한 것은 제가 꿈꾸는 보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

지난 15년간 여의도에 있으면서 제가 몸담아 보지 않았던 진보진영에도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들의 생각 중에 옳은 것도 많았고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좋은 생각, 옳은 생각을 가진 선량들이 모인이 국회가, 우리 정치가 왜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신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가 하나의 해결책이 되기를 소망하

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아주 훌륭한 내용의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유승민 대표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 국무위원(통일 홍용표·국토교통 유일호·해양수산 유기준) 인사

(10시49분)

○의장 정의화 다음은 신임 국무위원 세 분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시지요, 악수를 하는 동안.

유승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에게도 예를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홍용표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통일부장관 홍용표입니다.

남북 관계의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이라는 역사적 계기를 맞아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 항상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홍용표 장관님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통일 문제의 일대 혁신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된 유일호입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를 맡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과 항공 등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국토교통부 전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조언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된 유기준입니다.

지금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의 원만한 수습, 전통 해양수산업의 구조개혁과 경쟁력 강화, 미래의 유망 신산업 육성, 안전관리 체제의 혁신 등 정책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해양수산부장관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등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지도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 의원(267인)

강기운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영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립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이학영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장윤석	전병현	전하진	전해철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정갑윤	정문현	정병국	정성호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정식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동익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남인순	노영민	노용래	노철래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개의 시 재석 의원(177인)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권성동	권垠希	김경협	김관영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김세연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김용남	김윤덕	김재경	김정록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김제식	김종훈	김춘진	김태원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길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희국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문정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민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박인숙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손인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동우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심학봉	안규백	안철수	안홍준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제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학영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전병헌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성준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홍익표 홍일표
 홍중학 홍지만 홍철호 황우여
 황인자

○산회 시 재석 의원(230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垠희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정
 김현미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상은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욱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홍근 배덕광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욱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현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최경환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청가 의원(12인)

길정우 김현숙 송광호 안민석
 유기홍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정미경 조원진 홍문종 홍의락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박형준
 의사국장 장대섭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완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이취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외교부장관 윤병세

통 일 부 장 관	홍 용 표
법 무 부 장 관	황 교 안
국 방 부 장 관	한 민 구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정 중 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 중 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동 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 상 직
환 경 부 장 관	윤 성 규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기 권
여 성 가 족 부 장 관	김 희 정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유 일 호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유 기 준
국 민 안 전 처 장 관	박 인 용
○출석 정부위원	
보 건 복 지 부 차 관	장 옥 주

【보고사항】

○의안 제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5. 4. 7 김도읍 · 김명연 · 안홍준 · 이병석 · 권성동 · 김희선 · 김정훈 · 황인자 · 박민식 · 홍일표 의원 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 발의)

(2015. 4. 7 임내현 · 민홍철 · 김성곤 · 서영교 · 박지원 · 정호준 · 이상민 · 김동철 · 강기정 · 권은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5. 4. 7 민홍철 · 김영록 · 신정훈 · 김영환 · 주승용 · 이찬열 · 이개호 · 이종진 · 김경협 · 안규백 · 최원식 · 조경태 · 정호준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5. 4. 7 이철우 · 박명재 · 김종태 · 홍지만 · 정두언 · 권성동 · 정희수 · 강기윤 · 조현룡 · 장윤석 · 강석호 · 강은희 · 황영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5. 4. 7 김명연 · 홍철호 · 김정록 · 한선교 · 박대출 · 민병주 · 민현주 · 김제식 · 김도읍 · 이병석 · 문정림 · 김기선 · 염동열 · 박인숙 의원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4. 7 정부 제출)

이상 2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2015. 4. 7 우원식 · 강기정 · 강동원 · 강석호 · 강창일 · 權根希 · 길정우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진 · 김기선 · 김기식 · 김기준 · 김동철 · 김명연 · 김민기 · 김상희 · 김성곤 · 김성주 · 김세연 · 김승남 · 김영록 · 김영주 · 김영환 · 김용익 · 김우남 · 김윤덕 · 김을동 · 김재운 · 김제남 · 김정록 · 김춘진 · 김태년 · 김태원 · 김한길 · 김현 · 김현미 · 남인순 · 노영민 · 노웅래 · 도종환 · 문병호 · 문재인 · 문희상 · 민병두 · 민병주 · 민홍철 · 박광온 · 박기춘 · 박남춘 · 박민수 · 박범계 · 박병석 · 박수현 · 박영선 · 박완주 · 박원석 · 박주선 · 박지원 · 박혜자 · 박홍근 · 배재정 · 백근기 · 백재현 · 변재일 · 부좌현 · 서기호 · 서영교 · 서용교 · 설훈 · 송호창 · 신경민 · 신계륜 · 신기남 · 신의진 · 신정훈 · 신학용 · 심상정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안철수 · 양승조 · 오영식 · 오제세 · 이상호 · 우윤근 · 원혜영 · 유기홍 · 유대운 · 유성엽 · 유승희 · 유은혜 · 유인태 · 윤관석 · 윤재옥 · 윤호중 · 윤후덕 · 은수미 · 이강후 · 이개호 · 이노근 · 이명수 · 이목희 · 이미경 · 이상민 · 이상직 · 이석현 · 이언주 · 이원욱 · 이윤석 · 이이재 · 이인영 · 이종걸 · 이주영 · 이찬열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헌승 · 인재근 · 임내현 · 임수경 · 장병완 · 장하나 · 진병헌 · 진순옥 · 진정희 · 전해철 · 정두언 · 정병국 · 정성호 · 정세균 · 정수성 · 정진후 · 정청래 · 정호준 · 조경태 · 조정식 · 주승용 · 진선미 · 진성준 · 최규성 · 최동익 · 최민희 · 최원식 · 최재성 · 최재천 · 추미애 · 하태경 · 한명숙 · 한정에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홍종학 · 황인자 · 황주홍 의원 발의)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2015. 4. 7 신성범 · 염동열 · 이종배 · 여상규 · 경대수 · 이정현 · 유승우 · 양창영 · 황영철 · 정문헌 의원 발의)

이상 2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

(2015. 4. 7 정성호 · 김경협 · 민홍철 · 박민수 ·

최민희 · 강창일 · 이개호 · 김광진 · 강동원 ·
김윤덕 의원 발의)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

(2015. 4. 7 심재권 · 조정식 · 이개호 · 노영민 ·
김광진 · 유성엽 · 도종환 · 이춘석 · 이학영 ·
최규성 · 이원욱 · 배재정 · 남인순 · 전해철 ·
양승조 · 임내현 · 박광운 · 강동원 · 설훈 ·
김춘진 · 장하나 · 정세균 · 이미경 · 유기홍 ·
신경민 · 정청래 · 유승희 · 최민희 · 김한길 ·
장병완 · 강기정 · 신기남 · 김상희 · 김성곤 ·
문재인 · 박홍근 · 진성준 · 김윤덕 · 박원석 ·
김영록 · 김관영 · 박주선 · 박기춘 · 김현 ·
이해찬 · 추미애 · 이종걸 · 임수경 · 윤관석 ·
한정애 · 김용익 · 정성호 · 윤후덕 · 신정훈 ·
김경협 · 우원식 · 원혜영 · 오제세 · 한명숙 의원
발의)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5. 4. 7 박남춘 · 이개호 · 조정식 · 진선미 ·
정청래 · 부좌현 · 김현 · 장하나 · 안민석 ·
한정애 의원 발의)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5. 4. 7 박남춘 · 부좌현 · 주승용 · 이개호 ·
조정식 · 최민희 · 김상희 · 임수경 · 전해철 ·
서영교 · 남인순 의원 발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
발의)**

(2015. 4. 7 박남춘 · 부좌현 · 주승용 · 이개호 ·
조정식 · 김광진 · 최민희 · 김상희 · 임수경 ·
전해철 · 김성곤 · 남인순 의원 발의)

이상 2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청원 제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2015. 4. 7 경기 하남시 감2동 316-18 최병모 외
68인으로부터 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4월 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